

국내 언론에 나타난 귀농·귀촌 담론 분석

An Analysis of Urban-rural Migrants Issues Reported in Korea Media

최현우¹⁾ · 이채완^{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전문연구원¹⁾, 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 부연구위원²⁾*

Choi, Hyounwoo¹⁾ · Lee, Chaewan^{2)*}

Senior Researcher, Quality of Life Policy Research Cen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¹⁾
Associate Research Fellow, Culture and Tourism Research Division, Jeonnam Research Institute²⁾

Abstract

Rural return migration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beyond population moveme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is importance underpins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various rural migration policies aimed at addressing regional extin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surrounding rural return migration in the media over the past 16 years using the Korea Press Foundation database, interpreting the findings in relation to government policies.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interest in rural return migration increased substantially after the mid-2010s, with this trend becoming more pronounced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this analysis, we identified how rural return migration has evolved from an individual choice into a socio-structural phenomenon influenced by government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ral migration policies.

Keywords: Urban-rural migrants, Media reports, Big data analysis

I. 서론

귀농·귀촌 현상은 단순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상태에서 확장되어 후계인력 양성, 농촌경제 개선 및 지역사회 유지를 통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가구는 2021년 정점에 달하는데, 정부는 해당 변화를 코로나19 범유행(pandemic)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도시주택 가격 등의 원인으로 진단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통계청, 2024).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저밀도 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전까지 귀농·귀촌은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통계청, 2023). 실제로 귀농인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75% 증가하고, 귀촌인구도 동일연도 기준 연평균 1.85% 증가하였다. 반면에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는데, 귀농인구와 귀촌인구가 각각 16.80%, 10.02%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24)는 이러한 추세를 국내 인구이동 감소, 도시지역 고령 취업자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한다. 이로써 귀농·귀촌의 흐름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귀농·귀촌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지방소멸위험 및 고령화 완화,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 Corresponding author: Lee, Chaewan
Tel: +82-61-931-9357, Fax: +82-61-931-9494
E-mail: cwlee@jni.re.kr

광범위한 변화가 유발된다. 2022년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귀농·귀촌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연평균 순진출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도 점진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한다(한국은행, 2022). 정부 부처는 이러한 역도시화 현상에 주목하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특히, 2015년 시행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귀농어귀촌법)과 5년 단위 종합계획인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등은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진과 농촌지역 인구의 양적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학계에서도 귀농·귀촌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귀농·귀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귀농·귀촌인구의 활성화에 따른 동기, 경험, 사례 등 현상에 대한 심리적·개인적 의미를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성학, 서정원, 2014; 김원동, 2015; 우성호, 이성근, 2015). 이후 2010년대 후반부터는 정착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와의 갈등, 역귀농·귀촌,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측면의 연구로 확대된다(유영민 외, 2017; 윤순덕 외, 2017; 이준우, 홍유미, 2018; 이현정, 2019; 최원실 외, 2020). 또한, 행복추구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과 사회적 편익 등 귀농·귀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려는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윤영석 외, 2021; 윤자빈, 최성원, 2024). 하지만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귀농·귀촌의 사회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정책 형성과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귀농·귀촌 현상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주요한 공백으로 나타난다. 해당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언론 담론 분석이 필요하며, 정책 형성과 사회적 관심간의 상호작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6년간 국내언론이 보도하는 귀농·귀촌 담론과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에 대한 언론의 양적, 질적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관심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특히, 관심도의 변곡점과 정부 정책의 특징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농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귀농·귀촌

귀농·귀촌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유발하는 주체로 주목받는다. 귀농·귀촌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통한 정착을 의미하는데, 이주 목적과 형태에 따라 귀농과 귀촌으로 구분된다(김정섭 외, 2016). 귀농어귀촌법에서 귀농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촌은 농업 이외의 다양한 직업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귀촌 현상의 배경에는 농촌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2%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23). 2023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0%를 상회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통계청, 2023). 농촌의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소득 정체,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의 감소,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공동체 활력 저하와 문화적 단절 등 복합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정섭, 김종인, 2017; 박길환, 2015; 성주인 외, 2014).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도시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였다(박시현, 최용욱, 2014). 통계청(2017)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귀농가구는 10,923호, 귀촌가구는 21,501호에서 2017년에 귀농가구는 12,630호, 귀촌가구는 334,129호로 증가하였다. 특히, 귀촌가구의 급증은 농촌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귀농·귀촌 증가의 배경에는 다양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성주인, 김성아(2012)는 귀농·귀촌의 동기를 크게 경제적 동기, 생활 환경적 동기, 사회문화적 동기, 가치실현적 동기로 구분한다. 경제적 동기는 농업창업이나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한 것이며, 생활 환경적 동기는 자연친화적 생활과 환경적 가치 추구를 포함한다. 사회문화적 동기는 농촌공동체 생활과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며, 가치실현적 동기는 생태적 삶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귀농·귀촌은 단순한 ‘회귀’ 개념을 넘어 새로운 생활양식의 선택으로 인식된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환경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변화와 맞물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재해석되었다(유형석, 이동현, 2021; 이명기 외, 2020).

한편,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필수적이며, 대표적인 대안인 귀농·귀촌은 농촌 활성화의 핵심 전략으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김정섭, 김종인, 2017). 특히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은 인구구조의 개선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 새로운 경제활동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이끌기에(임설아, 정성호, 2017), 농촌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귀농·귀촌과 같은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현상의 확산과 함께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화하는데, 1990년대 귀농 자금지원 중심의 초기 정책에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2010년대는 귀농·귀촌법을 제정하여 귀농·귀촌을 중요한 농정의 하나로 추진하게 되었다(마상진, 박대식, 2019). 2020년대에 들어서는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연계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정책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5년 귀농·귀촌법의 제정은 귀농·귀촌 정책이 법제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한 인구이동 지원을 넘어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유형석, 이동현, 2021).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귀농·귀촌에 대한 개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구체화한 점이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기반 위에서 귀농·귀촌 정책의 제도화는 농촌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유입 증가와 같은 농촌사회의 세대교체와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귀농·귀촌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담론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농·귀촌 현상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은 사회적 인식과 담론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선행연구 동향

귀농·귀촌 선행연구는 도시민의 농업인으로서의 전환과 농촌으로의 거주이전 및 정착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귀농·귀촌 동기과 의향, 지역사회 적응과 갈등,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는 심리적·개인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김은석, 하지영, 2016; 마상진, 2018; 우성호, 이성근, 2015). 이들 연구는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을 배경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요인으로 환경, 주거, 건강, 공동체 상호작용 등이 꼽히지만, 귀농·귀촌 의사결정에는 인간관계나 연고지로서의 회귀 등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균, 2013; 우성호, 이성근, 2015; 윤순덕 외, 2017). 한편, 마상진 외(2016)는 농촌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에 따라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역귀농·귀촌 현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한다. 그는 경제적 동기보다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혹은 생태 공동체 등의 가치 추구형 동기를 가진 귀농·귀촌인의 역 귀농·귀촌 의향이 낮고, 농촌생활에서 주민과 형성하는 관계가 역귀농·귀촌 의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적응 및 갈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원정책의 진단과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박대식 외, 2019)도 진행되었다. 이들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의 주요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지원 관련 예산의 확대,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의 개발, 다양한 귀촌 정책의 개발, 귀농·귀촌 관련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의 개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원주민 이해 교육 강화,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 간의 화합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안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를 지적한 것이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는 귀농·귀촌을 단순한 인구이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변화를 수반하는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해당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주로 귀농·귀촌의 동기, 적응과정, 정책평가 등 특정 시점에서의 정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귀농·귀촌의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의 보도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담론 형성과정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해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가령, 귀농·귀촌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범유행 등의 사회·경제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동해왔다(마상진, 박대식, 2019). 또한, 시기별로 귀농·귀촌의 동기, 대상, 방식, 지원정책 등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대의 사회적 담론을 통해 표출되었다. 따라서,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귀농·귀촌 이슈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해당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귀농·귀촌의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KPF)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국내 기사를 검색하였다. 귀농·귀촌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언론사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별 해당 이슈를 비교 및 분석하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기사 분석을 위하여 ‘귀농’과 ‘귀촌’을 검색 키워드로 기사를 수집하되, 검색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6년 동안 보도된 기사로 한정하

였다. 다음으로 기사 선별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1차로 사회, 문화, 지역, 경제, 정치 분야에 속하는 기사를 초기자료로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대상과 관련성이 낮은 기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어를 설정하였고, 주로 ‘인사’, ‘홍보’, ‘행사’, ‘신년사’ 등 정부기관의 공고 성격을 드러내는 기사를 여과하였다. 2차로 중복되는 기사를 제외하여 총 5,293건의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틀인 언론사는 전국일간지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등 70개 매체를 대상으로 삼았으며<표 1>, 언급된 매체가 기타 매체에 비해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이 강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규명하려는 두 가지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시기별 귀농·귀촌의 보도량과 주요 키워드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국내언론의 귀농·귀촌 보도는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한국 사회의 어떠한 변화를 반영하는가?

2. 분석방법

최종 수집된 5,293건의 기사를 중심으로 키워드 트렌드 분석, 연관어 분석, 그리고 관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트렌드 분석은 특정한 핵심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시계열로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도별 핵심어의 언급 빈도를 분석단위로 하며, 핵심어가 언급된 기사 건수를 바탕으로 시간별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이후 연관어 분석으로 핵심어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 담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연관어를 도

<표 1> 언론사 분류

구분	언론사
전국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일간지	대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메트로경제,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금강일보,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출하였다. 연관어 분석은 귀농·귀촌이라는 핵심어와 동시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수치화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 등의 이미지 형태로 시각화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도 분석에서는 기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기관, 장소 등 개체의 관계망을 구조화하여 귀농·귀촌의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검색한 기사 가운데 정확도를 기준으로 상위 100건의 기사를 추출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Structural SVM)을 통해 개체명을 추출 및 연결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과 관련된 주요 담론을 파악하였다.

의 관심도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보도량의 과반수를 전라도 및 충청도 권역의 지역언론사가 차지하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며, 농촌의 지역적 분포 및 귀농·귀촌 가구 분포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읍·면지역인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은 경상도(28.8%), 전라도(24.5%), 충청도(18.7%) 순으로 분포 비중이 높았다. 또한, 귀농가구는 경상도(30.1%), 전라도(27.7%), 충청도(19.5%) 순이며, 귀촌가구도 경기도(26.5%), 경상도(21.5%), 충청도(19.8%) 순으로 지역적 분포가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의 이동이 집중된 지역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책, 사업 등의 측면에서 담론이 활발히 양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V. 연구결과

1. 언론보도 경향

언론보도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귀농·귀촌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지역일간지(82.6%), 경제일간지(9.8%), 전국일간지(7.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핵심어에 대한 농촌지역 언론사

2. 키워드 트렌드 분석

연도별 귀농·귀촌 관련 핵심어를 포함한 기사의 보도량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도별 기사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0개, 2012년 176개, 2015년 356개, 2019년 480개, 2023년 649개의 기사가 도출되었고, 해당 연도에 보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표 2〉 언론사별 보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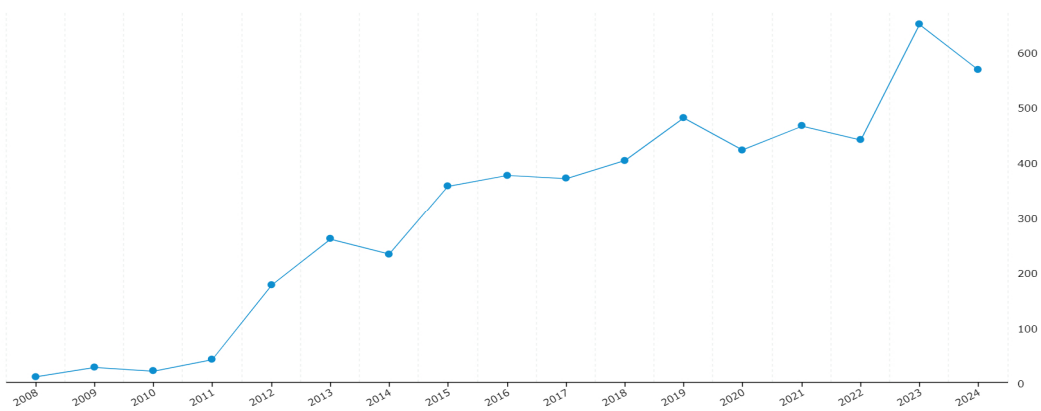
번호	언론사	보도량	번호	언론사	보도량	번호	언론사	보도량
1	전북도민일보	567	24	경남신문	57	47	제주일보	27
2	중도일보	327	25	영남일보	57	48	내일신문	25
3	전북일보	324	26	광남일보	56	49	충청타임즈	23
4	새전북신문	293	27	세계일보	54	50	중앙일보	22
5	대전일보	265	28	금강일보	51	51	서울경제	22
6	충북일보	207	29	동아일보	47	52	한국일보	21
7	전라일보	183	30	경북매일신문	47	53	서울신문	20
8	충청일보	182	31	매일신문	47	54	경향신문	19
9	중부매일	178	32	해럴드경제	46	55	브릿지경제	19
10	강원도민일보	171	33	제민일보	46	56	이데일리	19
11	동양일보	162	34	광주매일신문	42	57	중부일보	16
12	충청투데이	161	35	대한경제	40	58	이투데이	15
13	아시아경제	152	36	무등일보	40	59	경기일보	15
14	아시아투데이	106	37	한국경제	39	60	경인일보	14
15	전남일보	98	38	머니투데이	37	61	울산매일	14
16	강원일보	95	39	아주경제	37	62	울산신문	12
17	경북도민일보	88	40	파이낸셜뉴스	34	63	한겨레	11
18	경북일보	80	41	대구일보	34	64	기호일보	11
19	경남도민일보	74	42	광주일보	33	65	문화일보	8
20	남도일보	70	43	메트로경제	31	66	인천일보	8
21	경남일보	69	44	대구신문	30	67	경상일보	7
22	국민일보	67	45	부산일보	29	68	조선일보	3
23	한라일보	60	46	매일경제	27	69	국제신문	2

1]. 이와 유사하게 구글의 트렌드 분석(Google Trends)도 2012년, 2015년 등의 시기에 인터넷 검색량이 증가한 현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추세는 다양한 정책적,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후술할 연관어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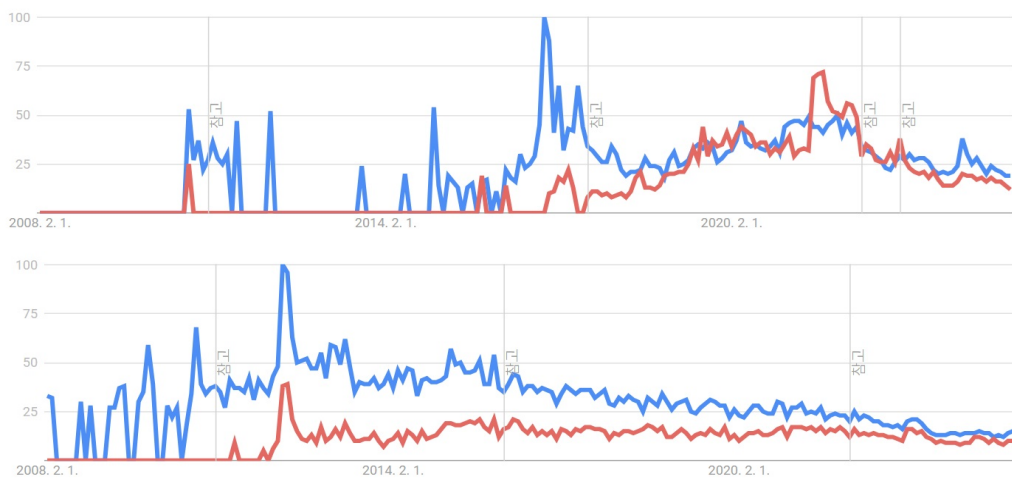
3. 연관어 분석

귀농·귀촌에 대한 연관어 분석은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중요 단어로 볼 수 있다. 귀농·귀촌 현상이 본격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드러난 공통적 핵심어는 ‘도시민’,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 ‘완주군’ 등이다. 이를 정부별로 세분화하면, 이명박 정부(2008~2013), 박근혜 정부(2013~2017), 문재인 정부(2017~2022), 그리고 윤석열

정부(2022~2024)로 구분할 수 있다<표 3>. 정부별 새롭게 등장한 핵심어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협’, ‘희망자’, ‘농어촌’, ‘정착지원’, ‘일자리’, ‘전문가’, ‘멘토’, ‘전원생활’ 등이 주로 언급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박람회’, ‘제주’, ‘희망자’, ‘교육생’, ‘수료식’, ‘지역주민’, ‘자리매김’ 등이 나타났다. 2009년 귀농가구가 전년 대비 83.9%가량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생태 가치 선호, 농촌 정착정책의 본격화에 기인하였으며(농림수산식품부, 2011),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 귀농 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 맞춤형 상담 등이 시행되었음을 핵심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을 통해 농촌 이주 준비, 실행, 정착 등 단계별 유입을 위한 정책을 강화했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이로써 일자리를 위한 이동에서 퇴직, 건강 등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귀농·귀촌자



[그림 1] 연간 키워드 트렌드



*검색기간: 2008.02.25. ~ 2024.12.31.(Youtube 검색량(상), Google 검색량(하))

[그림 2] 구글 트렌드

가 증가하고,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이 인식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특히, 2012년 언론 보도량이 급증한 기저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귀농가구와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 등 인구 유입에 대응한 관련 제도 및 정책 확대에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등장한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행사 키워드의 빈도 증가는 정부 지원사업 확대를 시사한다. 이 시기에 귀농·귀촌정책 기초가 인구 유입에서 안정적 정착으로 변환되었고(이서연, 이주현, 2019), 2015년에 이르러 귀농어귀촌법이 제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5년 단위로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는 ‘고창군’, ‘완주군’, ‘부안군’, ‘서귀포시’ 등 도농복합시 및 군 단위의 구체적인 농촌 지역명이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귀농어귀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실제 관심을 나타내는 결과인데, 2016년과 2017년은 농촌 순유입인구가 가

장 고점으로 추산된 기간임이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는 ‘코로나19’, ‘재능기부’, ‘농촌생활’, ‘안정적 정착’, ‘고령화’ 등의 단어가 두드러졌으며, 윤석열 정부는 ‘활성화’, ‘지자체’, ‘벤치마킹’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귀농·귀촌 지원예산은 2017년 230.2억 원에서 2022년 452.8억 원으로 96.7% 증가하는 등 귀농·귀촌 정책은 농정 중점 정책으로 인식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이와 함께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증가된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과 귀농 청년 가구 확대로 ‘농촌생활’, ‘안정적 정착’ 등의 연관이어가 특수하게 나타났다. 이후 코로나19가 지속된 2022년도에는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진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완주군은 단계별 살아보기 프로그램, 인턴십 사업 등 차별화된 정책발굴을 통해 전라북도 전체의 귀농·귀촌 가구 중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2023), 이는 지역활성화간 연관성을 시사한다.

〈표 3〉 ‘귀농·귀촌’에 대한 연도별 연관이어 분석

번호	1기(2008~2013)		2기(2013~2017)		3기(2017~2022)		4기(2022~2024)		전체(2008~2024)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도시민	110	도시민	275	도시민	408	완주군	451	도시민	381
2	고창군	82	농업기술센터	202	지원사업	204	도시민	378	완주군	240
3	농협	59	고창군	192	완주군	193	충북	197	농업기술센터	178
4	서귀포시	58	수도권	164	농업기술센터	177	박람회	187	박람회	171
5	희망자	48	박람회	161	박람회	177	괴산군	169	고창군	138
6	완주군	46	충주시	160	청양	163	지원사업	169	지원사업	130
7	농업기술센터	44	완주군	156	전남	156	고창군	167	멘토	127
8	농어촌	36	제주	150	재능기부	98	전남	149	충북	98
9	진안군	33	희망자	112	단양군	88	하동군	140	전남	96
10	농림축산식품부	31	교육생	94	고흥군	80	농업기술센터	130	희망자	77
11	전북도	29	순창군	90	지역민	65	활성화	126	정읍시	74
12	정착지원	29	부안군	83	영동군	61	지역주민	105	수도권	74
13	강원도	24	홍청군	82	수도권	60	정읍시	99	서귀포시	74
14	청양군	23	서귀포시	73	주민들	56	곡성군	99	청양군	63
15	순창군	23	수료식	72	옥천군	55	단양군	87	단양군	60
16	단양군	23	농림축산식품부	66	장수군	53	고흥군	76	곡성군	59
17	전남	23	청양군	59	코로나19	48	지자체	71	지역주민	58
18	일자리	22	부여군	57	농림축산식품부	47	진안군	67	홍청군	58
19	전문가	22	영동군	54	상주시	40	청양군	63	보은군	55
20	멘토	22	장성군	50	안정적 정착	39	보은군	63	하동군	54
21	양양군	21	남원시	48	농촌생활	37	농림축산식품부	57	농림축산식품부	49
22	수도권	19	지역주민	45	산청군	37	교육생	50	횡성군	43
23	공무원	19	전북도	40	전북도	32	장성군	45	합평군	42
24	자리매김	10	자리매김	18	고령화	30	안정적 정착	29	순창군	42
25	전원생활	8	-	-	-	-	벤치마킹	29	진안군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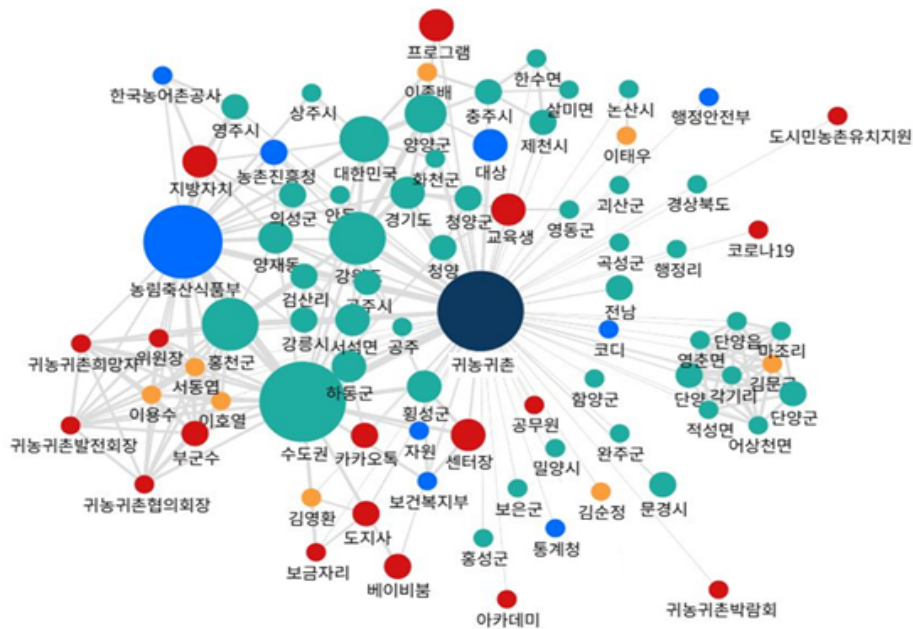
이상의 시기별 연관어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워드클라우드는 단어의 출현 빈도에 비례하여 글자 크기와 두께가 두드러지는데, 기관, 장소,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행위자가 중요하게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전시기에 걸쳐 도출되는 핵심어는 ‘도시민’, ‘수도권’,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완주군’ 등이다. 한편, 행위자 간 상호작용은 다음의 관계도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4. 관계도 분석

기사에서 주요하게 도출되는 개체인 기관, 장소, 인물, 키워드 간 연결된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기 위해 관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체의 색상에 따라 기관은 파란색, 장소는 초록색, 키워드는 붉은색, 인물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개체의 크기와 개체를 연결하는 실선으로 관계성을 분석하였다[그림 4].



[그림 3] ‘귀농·귀촌’ 연관어 분석



[그림 4] 관계도 분석

전체 기간의 중심어 간 연관성은 기본검색어인 귀농·귀촌을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기관과 ‘수도권’, ‘베이비붐’ 등 수요자, 그리고 일부 농촌지역 명을 중심으로 3~4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민의 이동이 유발됨으로써, 두 개체가 굵은 실선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연결성도 높아 동 기관의 귀농·귀촌교육, 농촌활성화에 대한 역할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대상자는 수도권, 경기도와 같이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농촌에 보급자리를 찾으려는 베이비붐 세대가 상당 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개체 간 연결성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릉시, 홍천군, 의성군 등 인구이동이 집중된 농촌과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선진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역명이 연결망에 포함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농촌은 귀농·귀촌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 유지, 농촌경제 개선 등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현상은 사회, 경제적 현안과 맞물려 있고, 시기별 관련 정책도 상이하게 전개된다. 이에 시대별 귀농·귀촌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의 변동뿐만 아니라 정부별 정책 간 연관성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카인즈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현상의 보도량, 연관어 분석, 관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주요 담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내재적 의미를 함께 기술하였다.

첫째, 귀농·귀촌 관련 언론의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 보도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전 시기인 2012년, 2015년, 2019년에도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승하였는데, 이 당시 언론은 정부의 인구유입 정책, 법률 제정 등의 정책 및 사회적인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둘째, 특정한 시기에 언론 보도량이 급상승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관어 분석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귀농·귀촌현상을 정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기(2008~2013)에는 ‘농협’, ‘희망자’, ‘정착지원’, ‘일자리’, ‘전문가’, ‘멘토’, ‘전원생활’ 등의 핵심어가 도출되며, 농촌이주를 단순한 이동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접근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시기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와 맞춤형 상

담 등 제도를 도입하면서, 귀농·귀촌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2기(2013~2017)에는 귀농·귀촌의 제도화와 지역 차원의 정착을 위한 전략이 본격화되었다. ‘박람회’, ‘교육생’, ‘수료식’, ‘지역주민’, ‘자리매김’ 등의 핵심어와 실제 농촌지역 지명이 자주 도출되면서 잠재적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모색했음을 시사한다. 2015년 귀농·귀촌법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제도적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3기(2017~2022)는 코로나19 범유행과 맞물려 농촌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시기였다. ‘코로나19’, ‘재능기부’, ‘농촌생활’, ‘안정적 정착’, ‘고령화’ 등의 핵심어는 단순한 이주를 넘어 사회적 참여와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귀농·귀촌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귀농·귀촌 지원예산이 2017년 230.2억 원에서 2022년 452.8억 원으로 96.7% 증가하며, 정책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4기(2022~2024)에 이르러서는 ‘활성화’, ‘지자체’, ‘벤처마킹’과 같은 핵심어를 통해 이전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확산하려는 접근이 두드러졌다. 각 지자체의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상호 학습하고, 선도지역의 차별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셋째,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핵심어와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단순한 인구유입 정책을 넘어 다차원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청년 귀농·귀촌자,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한 원격근무 계층 등 각 세대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귀농·귀촌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 이는 시대별 핵심어 변화에 근거하며, 귀농·귀촌 희망 계층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1기(2008~2013)의 ‘멘토’ 개념을 발전시킨 지역 정착 지원 시스템, 2기(2013~2017)의 ‘지역주민’, ‘자리매김’을 반영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3기(2017~2022)의 ‘재능기부’, ‘사회적 참여’를 활용한 사회공헌형 정책, 그리고 4기(2022~2024)의 ‘벤처마킹’을 체계화한 지자체 간 협력 모델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 이슈가 시대별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언론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해당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별 정책 간 연결고리를 분석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예산 증가 추세를 고려한 효율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연구대상을 언론으로 한정하여 귀농·귀촌의 실제 수요자의 관심과 인식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 조사와 정책 효과성 측정 체계 구축,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종합적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매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담론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귀농·귀촌, 언론 분석, 빅데이터 분석

REFERENCES

- 김상균(2013). 중고령 귀농인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학, 서정원(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 *농촌계획*, 20(1), 105-113.
- 김원동(2015).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향수 너머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탐색. *농촌사회*, 25(2), 91-142.
- 김은석, 하지영(2016).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경험: 대졸 남성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2), 419-442.
- 김정섭, 김종인(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1), 33-48.
- 김정섭, 마상진, 김종인, 오정훈(2016).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11). 한 해 귀농·귀촌인 10,000명 수준으로 늘어,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740695>에서 인출.
-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1년 귀농·귀촌 인구 515,434명, 전년대비 4.2% 증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972>에서 인출.
-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3년 국내 인구가동 감소 등으로 귀농·귀촌 감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sessionId=QWnDgKRAbB3H>
- g32OGAEMJcoe.inst21?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MDY1OCUyRmFydGNsVmllldy5kbyUzRg%3D%3D에서 인출.
- 마상진(2018). 귀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53-72.
- 마상진, 남기천, 최윤지(2016). 역 귀농·귀촌 의향 영향 요인 분석. *농촌사회*, 26(1), 37-63.
- 마상진, 박대식(2019). 귀농·귀촌의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농촌사회*, 29(2), 7-32.
- 박길환(2015). 한계고령화율(고령화의 한계기술대체율) 개념을 이용한 농촌지역 경제-복지의 보완관계 모색 연구. *농촌경제*, 38(3), 1-35.
- 박대식, 마상진, 황정임, 김경인(2019). *귀농·귀촌 정책 진단 및 성과 평가보고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최용욱(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김성아(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12 자료집*(p.239-263), 서울, 한국.
- 성주인, 엄진영, 박유진, 정규형(2014).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2023). 완주군, 전북 귀농귀촌 인구 8년 연속 1위, <https://www.wanjuro.org/post/1799>에서 인출.
- 우성호, 이성근(2015).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3), 75-94.
- 유영민, 김용근, 안민지(2017). 농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요인과 인식차이 분석: 충남 서천군 농촌 주민 및 귀농·귀촌인 특성을 사례로. *농촌사회*, 27(2), 93-136.
- 유형석, 이동현(2021). 귀농·귀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55, 1-22.
- 윤순덕, 최정신, 마상진, 남기천(2017). 귀농·귀촌패널로 본 역귀농·귀촌실태. *농촌사회*, 27(1), 59-93.
- 윤영석, 김경덕, 이병훈(2021). 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 분석. *농업생명환경연구*, 33(3), 282-298.
- 윤자빈, 최성원(2024). 도시직장인과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 만족도와 농촌 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33(1), 105-141.
- 이명기, 순병민, 우성휘(2020).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

- 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호, 이나경(2023).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이서연, 이주현(2019). 50+ 귀촌 모델 개발. 서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이준우, 홍유미(2018).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0), 217-228.
- 이현정(2019). 농촌마을 사업에서 귀농·귀촌리더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용인 a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2), 201-228.
- 임설아, 정성호(2017). 귀농·귀촌인의 사회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8(1), 79-99.
- 최원실, 허태호, 이상현(2020).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43(3), 65-90.
- 통계청(2017). 시도별(시군별)·가구원수별 귀촌가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3%26tblId%3DDT_1A02020%26orgId%3D101%26에서 인출.
- 통계청(2023). 시도별(시군별)·가구원수별 귀촌가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A02020&conn_path=I3에서 인출.
- 통계청(2024).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80500&bid=226&act=view&list_no=430470에서 인출.
- 한국은행(2022). 전남지역 귀농·귀촌 현황과 시사점,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800/view.do?menuNo=200560&nttId=10071706>에서 인출.

Received 04 July 2025;

1st Revised 18 July 2025;

Accepted 28 July 2025